

건설업계, 공사비 지속 상승... 해외 프로젝트 등 수익성 '비상'

1월 건설공사비지수 사상 최고 에너지·물류 등 비용부담 가중 일부 해외현장 공정지연 가능성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발 중동 사태로 해외 프로젝트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사비 상승도 예고됐다.

1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다. 전년 동월 대비 1.72%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년 127.10으로 3년간 30% 가까이 뛰었다. 2024년 1월 129.77, 2025년 1월 131.03 등으로 다소 안정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와 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 건설업계에는 직격탄이다. 지난달 말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자재 수급 우려는 커졌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동 사태가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가격 전가가 불가한 상황에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조금 고개를 들고 있던 분양 시장에 공사비 인상, 물가 상승, 소비 침체의 대외 변수 양상은 심리적 타격도 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현재 건설업은 저수익 현장은 종료됐으며, 아직 초기 공정률의 프로젝트 비중이 높다"며 "원가변동을 충분히 내재화하며 리스크를 관

리할 수 있는 단계로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비가 급등했던 지난 2022년보다는 압력이 낮을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원가 급등의 핵심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는 착공 물량 증가에 비해 현장 인력 공급이 따라오지 못했던 인력 수급 불일치에 있었다"며 "유가 상승 자체는 부담 요인이지만 이번 국면은 2022년보다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

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공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기자재 수급과 안전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현재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력과 자재 이동 제약, 물류 불안정 등이 일부 프로젝트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24~2025년 일부 건설사가 해외 대형 공사 현장의 공정 차질과 추가 원가 투입으로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공정 지연과 공사비 증가가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건설사들이 주력하는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대부분으로 외부 여건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신규 발주나 협상 중인 프로젝트 착공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 1면 '유가 다시 90달러'서 계속

정부, 추경 가능성 시사 "한계기업 등 지원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기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 순번의 추경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항공화물 운송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중동 국가 여럿이 영공을 폐쇄했다. 전 세계 항공화물 수송량의 약 20%가 중단됐고 가전제품·의약품·귀금속 등의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값 오름세도 둔화했다. 지난주 2~3%대의 일일 상승률을 기록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같은 시간 리터(1)당 0.24% 오른 1907원 선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은 하루 새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5.96% 급락한 데 이어 이날은 반대로 5.35%(+280.72포인트)나 도약하며 5500선을 되찾았다. 원·달러 환율도 1469.3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6.2원 내렸다.

이른바 시장 "호제"로 작용한 트럼프의 발언이 수일 내 신빙성을 입증하게 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논평은 하지 않은 채 민생·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1면 '중동리스크 확산'서 계속

수급 안정대책 변수 작용

다만 구조조정 논의의 방향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원료 수급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정부는 구조조정보다 납사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정책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원료 가격 상승과 업황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경우 사업 구조를 서둘러 정리하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어느 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며 "정부 입장에서 구조조정보다 당장 납사 수급 안정이 더 급한 과제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 공급이 막히면 공장 가동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 정부도 지원 방안과 수급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압박과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사업 재편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료 확보 대응에 집중하면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당정, '석유류 최고가격제' 추진... "비정상적 인상 차단"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회의

UAE산 600만배럴 원유도입 확정 금융시장·민생물가 안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 사태로 촉발한 석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TF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동사태에 편승해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했는데,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제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며 "이는 모니터링 단계지만 실제 조치는 '경계 단계' 이상의 조치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면 최고가격제 같은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뉴시스

경우"라고 했다.

안 의원은 석유류 가격 급등을 틈탄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2000 케이스 정도 집중 조사했고 엄중한 제재 내용 등 실적을 조만간 발표하려 준비 중"이라며 "통합 조사 대상으로는 사재기, 담합 세무조사, 불량 품질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TF는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 안정 ▲외환 금융시장 안정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산 600만배럴 원유 도입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국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비축 기지에(원유) 686만배럴이 있다"며 "필요하면 이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계약에 따라 정부에 우선매수권이 있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업계 소통 강화... "피해 최소화 총력"

간담회 통해 수산물 수출 피해 파악

해양수산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수산물 수출 피해규모 파악에 나선다.

해수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11일 서울 모처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 6곳이 참석한다. 또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협회 등 수출지원 기관 5곳도 동석한다.

해수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의 피해·어려움이 발생할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이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